

여야, 45일간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은 국힘이 맡는다

(국조특위)

내일 국회 본회의서 계획서 처리
중앙선관위·각급 지역 선관위 대상
민주 9명·국힘 7명·비교섭 2명 구성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으나 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가칭)로 정했고,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또 여러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

한 없이 충분히 관계 기관에 대해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지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한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

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천 수석은 “비교섭단체 두 분이 배정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권한이라 의장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와 관련해 범죄 행위가 일어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 본부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청년 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국민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장관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데 유감을 표하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李 “재외국민도 주권자… 투표권 문제 신속히 해결”

이탈리아 동포 만나 오찬 간담회
“재외국민 보호·영사 지원 행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교민들을 만나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권자들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권을 행사 못하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 문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국민의 의사가 모국의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며 재외국민 역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지원에 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어서도 더욱 촘촘하게 행하겠다”며 지난 12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운전면허증, 체류 자격 허가 등 재외동포의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

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한국 인인가’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부담스러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딜 가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며 “여러분(교민)들의 노력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급변하는 사회도 흔치 않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짧은 시간에 경제적 성취는 물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지 않았나”라며 “다음 세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우리 외교의 가장 든든한 뿌리”라며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입양 동포 가족 찾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입양 동포 여러

분과 그 자녀들이 모국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쉽게 다 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탈리아를 좋아하는지 이번에 와서 알게 됐다”며 “과거가 박물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양국은 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해 가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로, 그 신뢰는 동포 여러분이 쌓아온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서예진 기자

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美 301조 대응 논의

정부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제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한-몽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형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올해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관계 부처와 모색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고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李 대통령, G7서 개발협력 해법 제안

“공여·수원국 간 새 파트너십 모색”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방(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현안 대응과 대유럽 외교 확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비앙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오후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을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의 첫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의 첫 세션에서 참여국들과 함께 최근 국제 개발원조가 축소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원국들의 개발수

요는 여전히 확대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의 공적재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G7 등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수원국들이 공적 재원을 활용해 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자립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노력도 소개했다.

또한 각국의 기술 격차가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및 글로벌 AI 허브 등 우리 정부의 AI 관련 비전도 공유했다.

정부는 이번 이 대통령의 G7 참석을 계기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속 초청을 통해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 간 만남이 된다.

이번 G7에선 중동 정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 다. /서예진 기자